

# “‘폰’ 트롤타워… 새벽출근 국민 볼 낮 있다”

민주당 '尹, 자택서 폭우대책 지시'에 맹공

강훈식 “비상상황 때 콘트롤타워 역할 하겠다”

고민정 “전화 지시로 할 일 했다 생각하지 않겠”

윤영찬 “더 큰 위기 와도 전화통화 대응할 건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로 인해 대통령실이 아닌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도대체 전화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인가”며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만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 “취임 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라며 “대통령은 24시간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로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민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신뢰하실 수 있을지 윤 대통령은 자문자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훈식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인조를 다루는 국가 재난 상황 앞에, 재난의 총책임자, 재난관리책임자 할 대통령! 비와서 출근을 못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를 용산 집무실로 옮길 때, 국가 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 것이 불과 3개월 전”이라며 “향후 비상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방화에 접근해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비서

실, 경호실 안보실의 수장들이 대통령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라도 어제는 대통령을 집무실에 남겨놓아야 한다”며 “처음 해보는 대통령 보좌리지만 이번 일은 해명이 불가하다. 대통령실이 왜 있는지 존재 이유가 의문일 정도로 어제는 큰 사고를 쳤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 후보도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휘 병커에 있는 위기관리 센터를 찾아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체크해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폭우로 고립된 자택에서 전화통화로 총리에게 지시했다고 할 일을 했다 생각하지는 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는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 전국에 연결된 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이동할 필요 없는 청와대를 굳이 버리고 엄청난 세금을 들여 용산으로 옮기더니 기록적인 수해 상황에서 전화로 업무를 본다”며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와서 교통과 통신이 어려워지면, 그때도 총리 시종과 전화 통화로 대응할 거냐”고 꼬집었다.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도 “발정된 청와대를 왜 나와서 이러한 비상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 위급한 국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폭우가 만든 서울의 풍경

전 날 내린 많은 비로 서울 도로 곳곳이 침수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전날 비로 침수된 차들이 도로에 영겨있다.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는 “정부가 무능하면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게 나라냐는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는 “콘트롤타워가 아니라 ‘폰 트롤타워’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출근해야 하는 국민들 볼 낮은 있냐”고 되물었다.

이원욱 의원은 “이러다 재택근무한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대통령직은 누구나 수행할 수 있지만 아무나 수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아무나 아니라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모습을 위기대응으로 보여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호

소드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정부를 향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과 침수 피해구 및 건물에 대한 재해구호기금 등의 신속한 재정지원을 건의드리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상황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홍근 당대표 후보도 “재난 대비에 있어 낮은 곳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해 서울시 도시 인프라를 점검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

계를 유지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중부의 추가 피해 방지와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수도권에 기록적 폭우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화 통화를 하며 침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광화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나 피해 현황을 직접 방문하려 했지만 서초동 자택 부근이 침수돼 이동이 여의치 않아 자택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 국제보건의료 분야 국회사 협력 강화

빌 게이츠, 16일 국회 방문  
국제공조·리더십 주제 강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이자 현재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이사장 빌 게이츠가 오는 16일 국회를 방문한다.

9일 국회 측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16일 오전 10시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한다. 이어 오전 10시40분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코로나19 및 미래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연설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경미 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빌 게이츠 측에서는 그를 포함해 조세릴 재단 유럽·중동·동아시아 대외협력 총괄이사, 제임스 카터티(James Carty) 재단 중동·동아시아 대외협력 임시 부총괄 미호코 카시와쿠라(Mihoko Kashiwakura) 재단 동아시아 대외협력 총괄 등이 자리한다.

빌 게이츠가 국회를 찾은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마트 기부(Smart Aid)’, ‘더 좋은 세상과 더 강한 한국을 위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이번 국회 방문은 김 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지난 6월28일 김 의장이 트레버 문델 빌&멜린다게이츠재단 글로벌헬스 부문 회장과 면담할 때 빌 게이츠의 방문을 요청했고 빌 게이츠가 이에 응하면서 성사됐다.

빌 게이츠는 우리 국회사와 국제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방한한다. /뉴시스

## 김진표 의장 “韓 무기 성능 우수”

루마니아에서도 ‘K방산’ 세일즈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방산과 원전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세일즈 외교를 이어 나갔다.

앞서 폴란드 일정 후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한 김 의장은 지난 7일 루마니아 정부 주요 각료들을 만나 11조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할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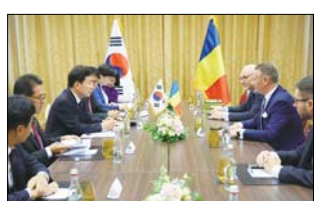
김 의장은 이날 수도 부쿠레슈티에 있는 상원에서 알라나 슈테파니아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의 회담을 시작으로 상원의장 추추 공식 오찬, 상·하원 외교위원장 및 루한 의원친선협회 접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김 의장은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에게 “최근 유럽 지역의 급격한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루마니아도 군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 방산업체들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K2전차, K9자주포, FA-50경공격기 등의 총괄 계약을 체결했고, 호주 아랍에미리트와도 방산협력이 활발하다”며 “한국산 무기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호환 가능한 무기체계라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군 장비 현대화를 위한 무기 구입 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DX Korea 2022 방산 전시회에 루마니아 국방장관을 공식 초청했다.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는 이와 관련 “방산 전시회 자리에서 (양국 관계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뉴시스



고 회담했다.

김 의장은 전날 제안했던 한국과 루마니아, 미국 3국 간 3각 협력 필요성도 다시 언급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빌리젤 다넬 포페스쿠 에너자부 장관은 “미국과 소형 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300MW 이하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협력 관련 이해각서를 체결했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원전 건설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면 의회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나토 정상회의에서 루마니아와 한국 정상간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올해 가을 유엔총회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에 김 의장도 “루마니아 의장의 방한이 20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며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를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접견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배혜련·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 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권현준 국제국장,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 등이 함께 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순방 중이다. 오는 9일에는 이온-마르첼 치울리쿠 하원의장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 “스스로 돌아보고 자숙 계기로 삼을 것”

‘수익계약 논란’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징계 피해… 자문위 ‘조례·법률 적용 못해’

가족회사의 수익계약 논란으로 질타를 받아 온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차원에서의 징계를 피하게 됐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9일 시의회에서 이 의장의 수익계약 논란과 관련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자문위는 이 의장의 수익계약 논란을 “지방계약법”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위반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를 내었다.

윤리강령 조례의 경우 자문위는 “조례에서 수익계약 체결의 제한은 자료 제출요구를 한 경우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면서 “남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집행부 담당자가 시의회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시의회 사무국에서 이 의원에게 해당 신고를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지방계약법 위반과 관련하여 자문위는 “관련 법적 처분은 계약당사자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이 의원은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분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 사건으로



다만 자문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갖고 사과하고 제도 보안을 권고한다. 이해충돌방지 담당자 지정과 법이 규정하는 각종 신고를 조속하게 이행함으로써 이 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감사원은 이 의원의 가족회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18건에 약금액 7억4473만1천원에 달하는 공사를 전주시와 수익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 6월 시의회 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일부 동료의 원으로부터 가족회사의 수익계약 문제가 반복해서 거론됐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지적된 대부분 수익계약 공사가 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받았고, 시의원이 된 후부

터 건설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의장은 직권으로 자신의 문제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인 자문위에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자문위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수일간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자문위의 의견은 윤리위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결정됐다.

자문위의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이 의장은 사과문을 냈다.

이 의장은 “최근 저와 저의 부친이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의 수익계약 논란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면서 “오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시인의 뜻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자숙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의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각종 교육과 인식 확립에도 민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검찰, 직접 수사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된다.

전주시청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이송 접수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들을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

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업무방해, 수뢰후부 정처사,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작년 5월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으나 2차례에 걸쳐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서울남부지검은 ‘타이스타넷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시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시한부 기소 중 지된 상태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